

공천은 당선?... 민주당 곳곳 경선 후유증

광주·전남 재심 청구·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잇따라 전략공천 역풍·고무줄 경선률에 지역민 불신감 커져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대부분 확정됐지만, 경선 과정에 따른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경선은 곧 본선,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정책 선거는 뒷전인채 공천에만 '올인'하다 보니 곳곳에서 후보 간 공방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재심 청구,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당 지도부가 경선 방식 등 일관성 없는 의사 결정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불신을 더욱 키웠다.

◇경선 혼탁에 공천 불복도 잇따라=29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당내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청구,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당내 경선도 흑색선전과 비방 등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권리당원과 유권자들의 경선 참여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청장 경선에서는 현직 임우진 서구청장이 '유승운전 2회' 전력으로 경선에서 배제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경선에 참여한 서대석 예비후보의 과거 세 차례 유승운전 경력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후보 간 날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보현 서구청장 경선 후보는 "유승운전 적발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서 후보는 유승 운전 3회 전력이면서 그동안 현직 서구청장의 유승 운전 전력을 문제 삼아 공천배제를 주장했는데 이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10년 이내 유승 운전 경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10년을 넘긴 오래전 유승 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당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구청장 경선 후보에 탈락한 일부 후보들

의 재심 청구도 잇따르고 있고, 일부 후보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특히 광주 북구청장 경선과 광산구청장 경선에서는 일부 후보들 간 단일화에 '잡음'이 생기면서 여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민주당 자치단체장 경선이 치러진 13곳 중 절반 가까운 6곳에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경선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들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선거인단

이 중복되고, 누락 권리당원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고무줄 잣대' 경선률도 도마 위에=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중앙당의 이중적인 경선률 적용도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에는 지역위원장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를 적용했다. 반면,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률에는 '문재인 청와대'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여론조사 100%'를 적용했다. 서구갑에는 직전 지역위원장인 박해자 전 국회의원과 송갑석 노무현 재단 광주운영위원이 맞붙었고, 무안·영암·신안에서는 지역위원장 출신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맞붙었다. 이 때문에 중앙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 경선률을 제멋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고, 결국 중앙당이 민심을 외면한 꼴이 됐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 속에 '호남은 쫓으면 된다'는 식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 B컷 공개 청와대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뒷 얘기와 'B컷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운영진 국민소통수석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리설주 여사에게 무슨 말씀을 들은 걸까요"라는 설명을 달았다.

평화와 정의, 선거구제 개편 '발등의 불'

6월 개헌 무산에 난항... '야 3당 개헌연대로' 불씨 살리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이후 당의 최대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평화와 정의는 개헌 정국에서 원내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 및 다당제 정착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었지만, 일단 6월 개헌이 물 건너가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강하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안보와 외교 문제가 당분간 정국의 중심으로 다뤄질 공산이 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에 평화와 정의는 바른미래당과의 '야 3당 개헌연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29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최소한 총리추천제는 허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됐고,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며 "논의를 지속하면 합의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 헌법개정특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의 큰 틀에 합의하면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르면 내주 초 야 3당이 공동개헌안을 발표하고 거대 양당을 방문해 합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국당, 전국 돌며 다시 대외 공세

원내투쟁도 강화키로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기간 일시적으로 멈춘 전방위적 대외(對外) 공세의 포문을 다시 연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바람들이 성격도 있다.

한국당은 다음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한다고 당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먼저, 30일 홍준표 대표 주재로 소속 의원 만찬을 한다. 홍 대표가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만찬을 주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공천접수를 받고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전국을 돌며 필승결의대회를 한다. ▲5월1일 부산 ▲2일 경남 창원 ▲3일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 ▲4일 오전 강원 ▲4일 오후 충북 청주 등으로 일정이 잡혔다.

당은 원내 투쟁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내건 특검 실시의 불씨를 다시 태운다.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며,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 전면 보이콧과 국회의사당 봉쇄 앞 전막 농성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갑석, 민주 광주서갑 국회의원 후보로

53.52% 득표 경선 승리

전략공천 논란 등으로 소란이 일었던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이 승리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후보 경선에서 송 교장은 53.52%의 득표율로 박해자 전 국회의원(46.48%)를 제쳤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 100% 반영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서구갑 재선거 공천은 박해자·송갑석 예비후보가 후보자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중앙당의 전략공천과 철회, 권리당원 경선 등 오라가락 결정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두 후보는 지난 16일 중앙당 면접까

지 치렀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날인 17일 서구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언했다. 이에 송 후보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와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까지 나서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당은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송 후보는 이번 본선에서 민주평화당 후보 등과 경쟁하게 됐다. 평화당에선 김병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홍희희 변호사가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송 후보가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하면 20대 국회 광주의 첫 민주당 의원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결국 '빈손'으로 끝난 4월 국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새 쟁점... 5월 국회도 공전 가능성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번의 본회의도 못한 채 다음달 1일 끝난다. 여야 간 정쟁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에 한 달 내내 공전만 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에 이어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끝에 아무런 성과 없는 '빈손 국회'가 됐다.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공전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은 '드루킹 특검'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여권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태세지만 한국당은 '위장 평화쇼'라며 반대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 시각차도 크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비리에 연루된 자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를 막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정쟁으로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만들었다"며 "방탄국회를 또 소집하는 한국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공전했기 때문에 5월 국회에서라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은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과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협상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5200만원
- H. 010-6838-1230

